

안전성·효능 확보 ‘국산 1호’ 백신, 자체적 백신후보 발굴 주도해야



성 백 린 | 연세대 의대 특임교수

우리나라가 드디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개발에 성공해 지난 5일부터 전면적인 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1년여간 세계적으로 10여개의 백신이 개발되었는데 그 중 특히 신속생산이 가능한 mRNA백신형과 벡터형 신형백신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접종되어 왔다.

이에 비해 국내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가 주도한 코로나 백신 ‘스카이코비원’은 ‘합성항원’ 백신이다. 이는 비교적 전통적 방식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mRNA백신에 비해 생산속도가 느려 초기대응을 선도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접종에 돌입한 mRNA백신과는 달리 합성항원 방식은 오랜 경험상 안전성과 효능이 모두 확보된 기술이다. 때문에 비교적 안전성 논란을 피하면서 미접종군에 대한 신규접종과 기 접종군에 대한 추가접종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초저온(영하 20~80도)이 요구되는 mRNA 백신과는 달리 이번 국내개발 백신은 냉장조건(2~8도)에서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다. 그동안 다양한 국제기구의 노력과 협력에도 불구하고 중저개발국 국민 10명 중 8명은 한 차례의 접종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국내개발 백신은 신규시장 개척뿐 아니라 향후 글로벌 승인확대를 통해 중저개발국 백신 공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국산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접종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국내생산을 통한 백신자주권 확보에는 지난 2년여간의 기업과 정부연구소, 국제기관 및 규제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무엇보다도 국내기업의 고도화 된 백신생산시설의 구축과 운용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생산시설이 포화되고 선진 각국은 자국내 공급을 우선시하는 수요와 공급사이에 커다란 불균형이 야기되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제 GMP 규격에 부합하는 백신생산능력은 해외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러브콜을 집중적으로 받게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도 중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요청으로 벡터형백신을 생산공급하고 국내 최초의 코로나백신 접종을 견인했다. 추가적인 미국 노바백스사의 요청으로 세계 최초의 합성항원 백신을 위탁생산해 2022년도 국내외 접종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이는 해외에서 개발이 완료된 후 국내에서 위탁생산한 것으로서 ‘국산화’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했다. 이에 비해 이번 백신은 국내회사가 개발과 생산을 공동으로 참여해 진행한 것으로 명실공히 ‘국산 1호’로 칭하게 됐다.

기업중심의 생산은 정부연구소와 국제기관 협력, 그리고 규제기관과의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선 정부는 개발되기 전부터 선구매 1000만회분 계약을 약속해 기업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간과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대규모 임상대신 비교적 소규모의 임상을 통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비교임상 3상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제공했다.

이러한 비교임상 평가에는 대조백신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가능해졌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와 국내 유치 1호 UN 산하기관인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해 신속한 임상검체 분석이 가능했다.

아울러 임상참여자들에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교임상연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했다. 향후 접종 수요가 충분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이미 코로나19는 정점을 넘어서고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에 접종이 이루어져 있다.

고무적인 것은 국내개발백신이 대조백신 대비 중화항체 치수가 더 높을 뿐 아니라 임상 연장연구를 통해 다양한 코로나 변이주에 대해 높은 면역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변이주와 이로 인한 중증으로의 이행을 억제하는 추가접종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과연 우리가 백신 자급화를 실현했는가? 이번 백신은 미국 워싱턴대학의 기술에 전염병예방혁신연합(CEPI)의 막대한 임상연구지원인 2500억 원에 힘입어 진행된 것이다.

이와는 별도의 방안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변이주의 대응백신도 해외 노바백스의 제품을 위탁형태의 생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좀더 효과적인 변이주 대응을 위한 다가백신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이를 순수한 국내개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인류와 이미 상주하고 있는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대응하는 콤보(Combo) 백신과 다가백신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범용(universal)백신도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 동안의 백신 ‘국산화’ 전략은 우리의 강점인 생산시설에 해외개발 제품을 접목한 것이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해외 바이오 생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분야 미국 내 생산 강조 행정명령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명공학 생산시설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는 미국의 미래전략으로 이해된다. 또한 생산시설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개발 패러다임에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할 것이다. 바야흐로 자체적으로 백신후보 발굴을 주도하는 중장기 기술패권 확립전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시점에 도래한 것이다.

정책제언

정부동향

정책브리프

알기쉬운 정책용어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고_성백린 연세대 의대 특임교수

행정안전부

행안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역 맞춤 성장과 판로 확대 지원

- 9월 20일(화)부터 9월 29일(목)까지 '민·관 협업체계구축사업' 지역순회 자문(컨설팅)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의 추진현황 점검과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순회 자문(컨설팅)을 9월 20일(화)부터 9월 29일(목)까지 약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민·관 협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올해 3월 35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각 1억 원(국비 0.5억, 지방비 0.5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 선정된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인, 지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판로지원, ▲물류·유통, ▲금융지원, ▲전시, ▲홍보, ▲인재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현안에 맞게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다.
- 이번 지역순회 자문(컨설팅)에서는 10개 지자체*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공유나 추가적인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향후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 * 충남 태안, 전북 전주, 전북 남원, 전남 순천, 광주 남구, 대전 서구, 경북 영주, 부산 북구, 경남 김해, 경북 청도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사업효과를 확인하고, 인구감소나 사회적경제 규모와 같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 등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해 개선·발전이 필요한 방안도 논의한다.
- 이번 지역순회 자문(컨설팅) 결과는 지자체 사업 추진현황 점검 결과와 더불어 10월 개최 예정인 전국 시·도 영상회의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사회적경제기업 매출 제고를 위해 2021년 홈플러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인터넷 판매점(홈플러스 물)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입점시켰다.
 - 현재 인터넷 판매점에서는 9개 지자체*의 약 160개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판매하는 700여 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13일(목)부터 10월 26일(수)까지 입점 1주년 맞이 특별기획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 *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김포, 강원, 충남, 전남, 제주
 - 특별기획전에서는 총 100여 개의 지역 대표상품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행사를 위해 지자체는 할인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고, 홈플러스는 행사 기간 중 온라인 광고를 지원한다.
 - 행안부는 이번 특별기획전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와, 기업과 상품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이 지역에서 민·관 협력의 본보기(모델)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특별기획전이 지역경제 활력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의 사회서비스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 농식품부,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공모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9일(월)부터 2023년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 동 사업은 농촌의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사회적 농장'과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확산하고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농촌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스스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현재 전국 14개 시·도에 사회적 농장 83개소와 지역 서비스공동체 22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동식 세탁과 집수리 등 주민 생활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령자 돌봄과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 농식품부는 2023년 약 130여 개의 농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국비 총 59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원 기간	지원 한도(백만 원)	지원 내용
사회적농장	개별('18~)	1년 차	20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2~5년 차	60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개선비
	공동체 단위('23~)	5년	90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개선비, 지원인력 활동비
	거점('20~)	3년	170	교육, 자문 등 거점농장 운영비 시설개선비, 지원인력 활동비
지역 서비스공동체('22~)		1년 차	50	서비스 공급 비용 및 공동체 운영비, 지원인력 활동비
		2~5년 차	90	

- 내년부터는 다수의 농장이 지역을 기반으로 협력하는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장 유형이 신설되며, 개별 농장 및 서비스공동체의 지원 첫째 예비단계가 도입되어 지원 규모가 조정된다.
- 변경 관련 상세 내용은 2023년 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8일(목)에 지자체와 관련 조직,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해당 시·군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면 설명회 참석이 가능하다.
- 그 밖에 공모 일정, 지원 규모 등 사업공고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사회적농업종합포털(socialfarm.kr)에서 안내하고 있다.
-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동 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 등이 자조, 협력을 토대로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등 따뜻한 농촌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벤처기업과 지자체·여행업계·투자자를 연결하는 ‘2022 관광기업 이음주간’ 시작!

- 지역기반 협업, 관광 재개, 관광서비스 수출 등 주제별 시연회 -
- 시도관광과장 회의 통해 관광벤처기업과 지역현안과제 해결 협업 논의도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신상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국정과제 ‘혁신적 관광벤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산업 생태계 주체 간 사업을 확대하고 협업을 촉진하는 ‘2022 관광기업 이음주간(Tourism Connect Week)’을 9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식 누리집(connect.tourbiz.or.kr)과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서울 명동 9. 20.~22.), 하이커 그라운드(관광공사 서울센터, 9. 20.~23.) 등에서 진행한다.
- 올해 2회째를 맞이한 ‘관광기업 이음주간’에서는 ‘참여, 연결, 혁신: 미래관광 1.0’을 표어로 정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관광 벤처기업과 창업초기기업이 만들어어나가는 새로운 관광의 미래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데 힘썼다. 특히 이번 행사는 관광산업의 대전환 시기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생태계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 분야 국내 대표 거대 신생(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벤처기업) ‘야놀자’ 김종윤 대표가 민간 추진위원장을 맡고 국내 관광창업 생태계에서 유명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추진위원회와 함께 마련했다.
- 9. 20. 제2차관, 융·복합시대 관광기업의 성장과 연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 약속
- ‘관광기업 이음주간’ 개막식은 9월 20일(화),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다.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관광벤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융·복합시대에서의 관광기업의 성장과 연대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할 계획이다. ‘야놀자’ 김종윤 대표는 ‘디지털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 관광 벤처기업·지자체·여행업계·국내외 투자자 등 300여 명 참여 9. 19.~23. 3대 주제별 시연회, 1:1 사업설명회, 기업 투자 유치 등 진행
- 올해는 국내외 관광 벤처기업과 여행업계, 지자체, 국내외 투자자 등 3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기반 협업, 관광 재개(리오프닝), 관광서비스 수출’이라는 3대 주제 아래 관광산업 주체 간 소통과 교류를 한층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변화 속에서 관광산업의 흐름을 조망하고 다가올 미래관광시대를 준비하는 주제발표, 시연회(데모데이), 사업 설명회 등이 이어진다.
- 특히 올해는 3대 주제별 시연회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9월 20일(화)에는 첫 번째 주제, ‘지역기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주제발표와 인구감소지역 관광혁신 아이디어 시연회를 신설해 지난 8월 30일(화)에 진행한 ‘에션리그: 배터리(BETTER 리)’ 심사(오디션)를 통과한 10개 관광 벤처기업들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관광혁신 제안’을 주제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펼친다. 결선 행사는 창업초기기업 전문채널 이오(eo)스튜디오를 통해 생중계한다.
- 두 번째 주제 ‘관광 재개(리오프닝)’와 세 번째 주제 ‘관광서비스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월 21일(수), 중국 대형 여행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 한국 관광벤처기업(주)온다, 한중 관광기술기업 간의 교류협력 장을 통해 중화권 관광객 대상 판매채널을 구축한다. 9월

22일(목)에는 유망 관광벤처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기업과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기업 설명회와 투자 상담을 진행한다.

- 관광공사와 한국벤처투자는 한국모태펀드 관광계정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와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특히 중국 알리바바그룹과 일본 후쿠오카벤처마켓 관계자들과의 투자 상담 등은 중화권·일본 시장 진출과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관광벤처기업의 관광흐름과 디지털 전환(DX),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 등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을 마련해 관광기업 대상으로 무료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 아울러 문체부는 ‘관광기업 이음주간’과 연계해 9월 20일(화), 전국 시도관광과장 회의를 열어 지역의 묵은 현안 과제들을 관광벤처기업들과 협업체 해 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관광벤처기업 소비자 특별 판촉행사 ‘하이커에어’ 온·오프라인 진행
- 대국민 관광벤처기업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특별 판촉행사도 준비했다. 하이커 그라운드 1층에서는 관광벤처기업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반짝 매장 ‘하이커에어(HiKR Air)’를 9월 20일(화)부터 23일(금)까지 연다. 온라인 네이버스토어를 통해서도 9월 20일(화)부터 30일(금)까지 특별 할인을 진행한다.
- 9월 23일(금)에는 ‘하이커에어’ 현장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여행사진 잘 찍고 보정하는 법’ 강연을 진행한다. 지역에서는 부산 관광기업의 반짝 매장 ‘부산 수퍼’를 동구 관광안내소에서 이음주간 기간(9. 19~23.)에 운영한다.
-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가업체들에 대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벤처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 공공기관이 늘어나고, 관광 창업 생태계로 투자 유치도 확대되길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열린 협업의 장을 더욱 확대하고 관광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향

윤 소 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윤석열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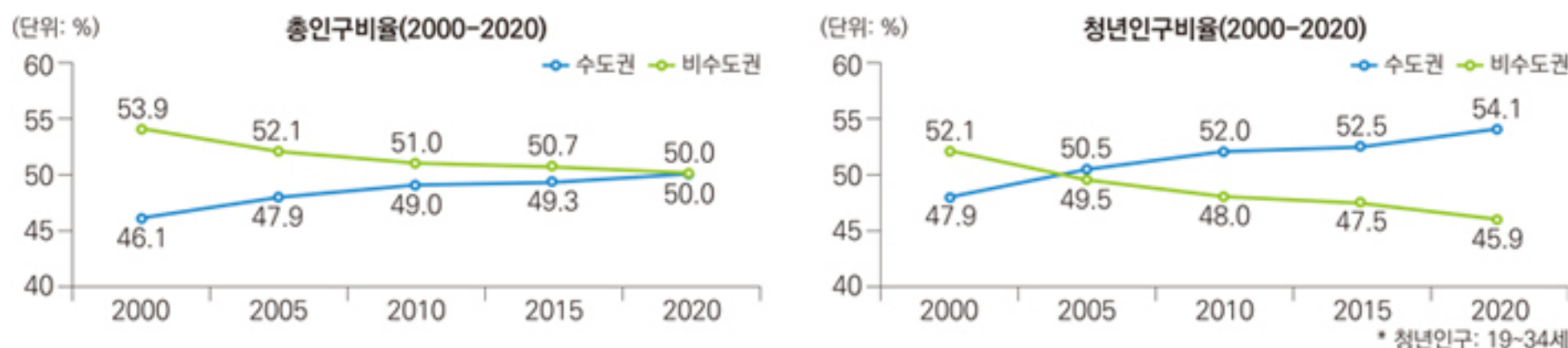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전략, '균형발전'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10개 국정과제를 제시함(대한민국정부, 2022.7.)
-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권력의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및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특성을 극대화 하여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 균형발전정책을 한정된 자원의 분배문제로 바라보면 지역 형평성을 위해 국가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희생시키는 정책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성장동력원을 확보하여 국가 운영의 안정성 및 내실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미래 발전을 위한 전체 파이(pie)를 키우는 전략임(김용웅, 2011)
- 수도권 중심의 발전은 일시적으로 국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토 공간·자원 활용의 낭비, 국가경쟁력 하락, 재정 리스크 증가, 지역이기주의·갈등 심화, 사회통합 저해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

국가균형발전의 지난 20년과 앞으로의 20년

- 지역 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성장거점 육성, 자율성과 분권 확대 등은 지난 약 20년의 균형발전정책에서 지속 추진되었으나,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인구 불균형은 심화됨(금창호, 2021)
- (총인구비율) 수도권: ('00) 46.1% → ('20) 50.0%, 비수도권: ('00) 53.9% → ('20) 50.0%
- (총인구비율) 수도권: ('00) 47.9% → ('20) 54.1%, 비수도권: ('00) 52.1% → ('20) 45.9%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비율 변화(2000-2020)



출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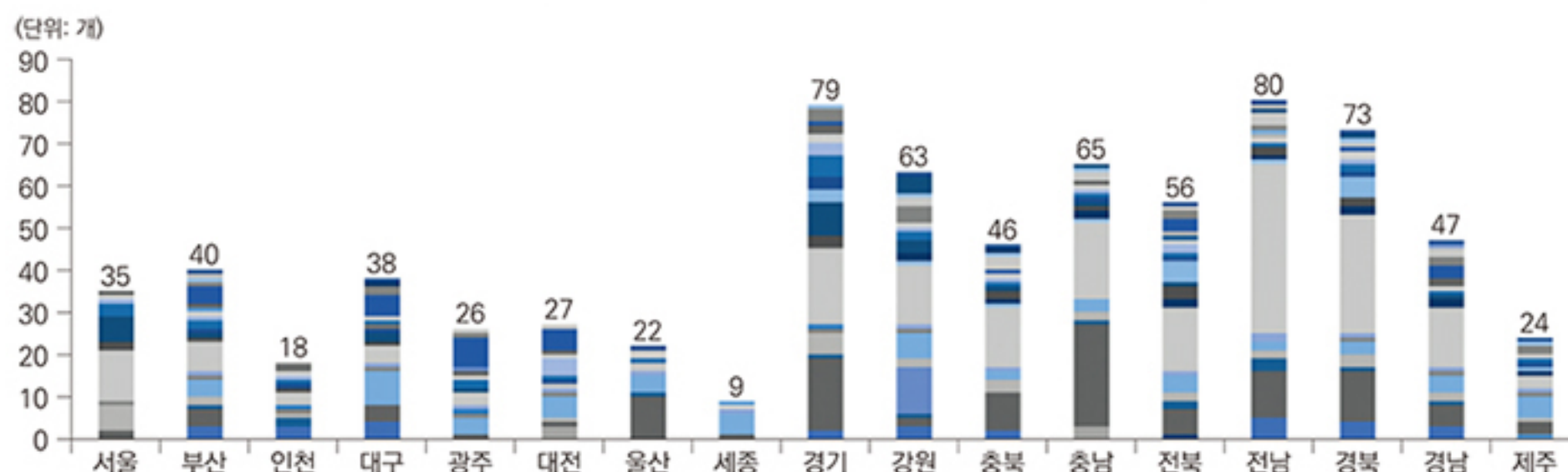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균등분배 원칙에 따른 정책사업 및 자원의 분산·중복 투자, 단기적·임시방편적 정책추진, 수도권 개발에 따른 흡입력 강화, 과도한 행정 규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한 위기의식 부족, 지방쇠퇴 원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제시됨(임형백, 2013, 김영수, 2022)
- 문제는 경제·사회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방을 중심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머지않아 지역 불균형이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임
-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 정부가 제안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금껏 진행된 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전략 수립이 필요함

0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현재와 문제점

정책사업 및 재원의 분산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

- 그동안 정부는 자원재분배에 의존한 균형발전보다 지역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화발전을 지원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간적·재정적으로 분산된 정책추진방식으로 인해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지 못함
- 모든 도시가 직면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위기에도 지역개발은 공간을 확장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으며, 각종지원사업은 소규모 형태로 분산·중복되어 개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연계가 미흡함
- 대표적으로 경제특구의 경우 현행법률로 지정 가능한 50개 유형 중 39개가 11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국 총748곳에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어 제도적 실효성이 떨어짐

•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비율 변화(2000-2020) •



출처: 인천상공회의소(2020), 전국 경제특구 및 인천지역 현황 분석

중앙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 따른 지역의 자생적 혁신역량 확보 제한

- 부처별로 추진하는 공모사업 위주의 지역산업 육성 방식은 기존 정책과의 차별화를 강조하여 정책·사업 간 연계성이 확보되기 어려웠고, 사업선정 및 추진과정에서 자율성이 제한되어 지역이 자생적인 혁신생태계를 공고히 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진종현, 2022)
- 또한, 사업 수주를 위한 경쟁 심화로 지역 내,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이 저해됨

수도권 개발 정책과 지역 균형발전정책의 상충으로 인한 정책효과 하락

- 수도권 인구·사업집중이 높은 상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병행되다 보니 수도권의 흡입력이 강화되고 균형발전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려웠음
- 도시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 중심의 개발은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 수도권 내부의 문제를 발생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정책들은 오히려 인구를 유인해서 규모가 비대해짐
- 이에 3기 신도시 개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등으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03.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자원과 역량이 집중된 압축형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 육성

- 미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공간적 확장을 통한 성장보다는 복합기능을 가진 압축형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 확보가 중요함
- 규모의 경제, 집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초광역권 내 중추거점도시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한 지역혁신역량을 축적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유사한 목표를 가진 지역발전 정책·사업의 통합과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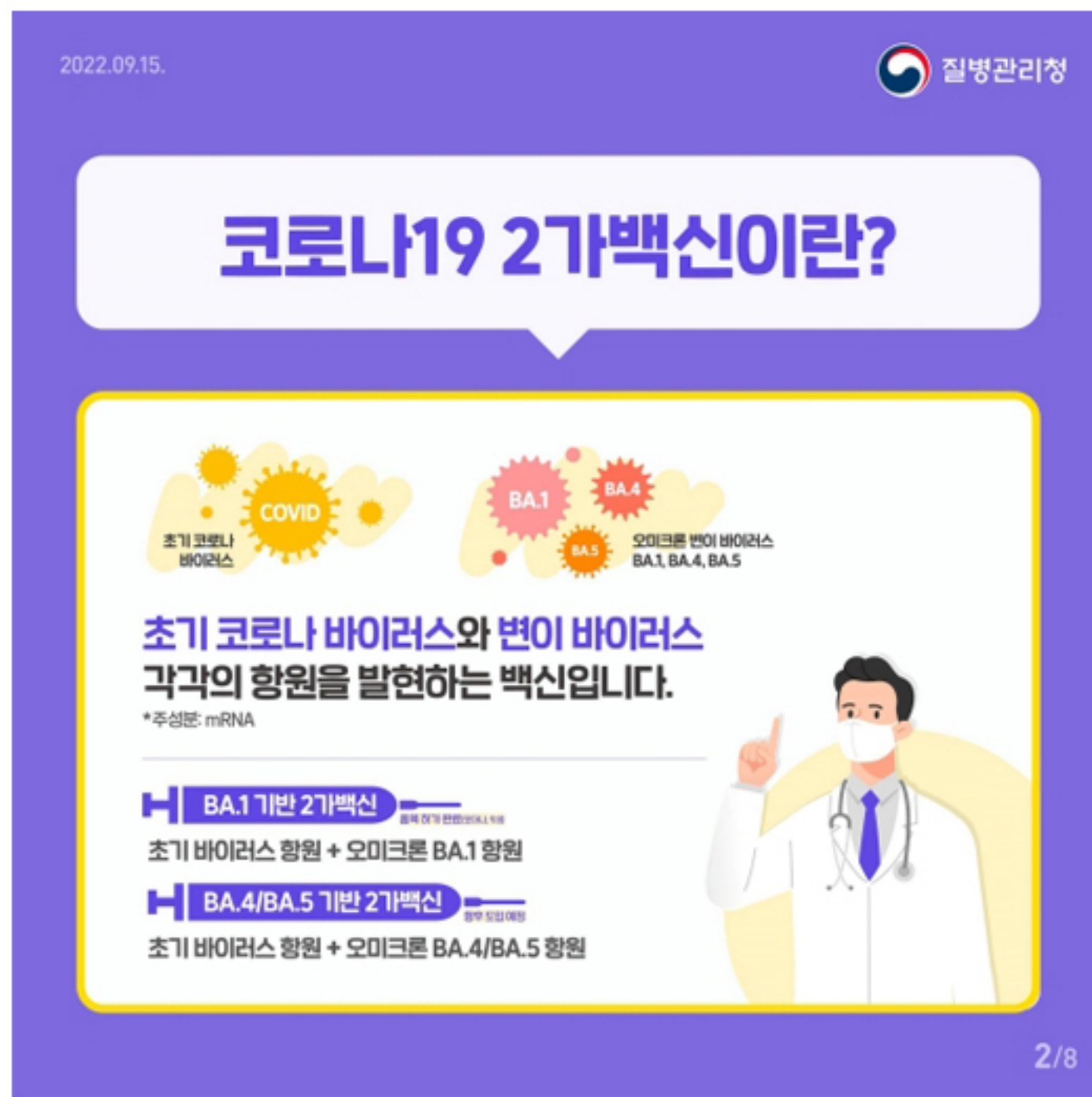
-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분석하여 부처 간 협의 및 기능의 분담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시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혁신도시·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존 성장거점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ODZ)·도심융합특구의 도입을 계기로 산발적으로 운용되는 경제특구를 기능적으로 연계·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지자체들은 초광역지역연합을 통해 지역 선당의 중심핵 역할을 할 중추거점도시를 선정하고 주력산업·대규모 SOC 개발등 주요 시책으로 통합·재분류·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음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강력한 권한의 이양

-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강력한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이 고유의 특수성과 부존자원, 잠재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생적 혁신 역량을 갖춰 갈 수 있도록 해야함
- 동시에 중앙에서는 정책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니터링·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내부 자원이 부족한 지역이 제도적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은 사업운영과정(사업선정, 추진, 예산집행 등) 전반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기반의 자원과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음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 부연구위원_윤소연

알기쉬운 정책용어



알기쉬운 정책용어

2022.09.15. 질병관리청

기존 백신과 차이점은?

2종의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제조

초기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2가백신은 기존 백신에서 확인된 중증 사망 예방효과는 지속되면서, 최근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8

2022.09.15. 질병관리청

2가백신의 효과성은?

모더나 2가백신(BA.1 기반 mRNA) 임상시험 결과,
기존 백신 대비 초기주에는 1.22배, BA.1에는 1.75배 더 높은 중화능*을 보였고
BA.4/BA.5에는 1.69배 높은 중화능이 확인되었습니다.

*중화능: 바이러스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능력

백신 종류	중화능 (GMT Ratio)
기존 백신	5,649
2가백신	5,977

백신 종류	중화능 (GMT Ratio)
기존 백신	1,473
2가백신	2,372

백신 종류	중화능 (GMT Ratio)
기존 백신	131.68
2가백신	115.59

백신 종류	중화능 (GMT Ratio)
기존 백신	458.28
2가백신	776.45

4/8

알기쉬운 정책용어

2022.09.15.

질병관리청

2가백신의 안전성은?

모더나 2가백신(BA.1 기반 mRNA) 임상시험 결과,
기존 백신 대비 이상반응 증상유형은 유사하나
더 낮은 발생 빈도를 보였습니다.



5/8

2022.09.15.

질병관리청

2가백신의 국내외 동향은?

국내 BA.1 기반 2가백신(18세 이상, 모더나)에 대해 허가완료(9.8)하였으며,
현재 국외에서 승인된 2가백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접종대상	접종백신
미국	18세 이상(모더나)	BA.4/BA.5 기반 2가백신
	12세 이상(화이자)	
EU	12세 이상(모더나, 화이자)	BA.1/BA.4/BA.5 기반 2가백신
영국	18세 이상(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
	12세 이상(화이자)	
일본, 호주, 캐나다	18세 이상(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

6/8

알기쉬운 정책용어

2022.09.15. 질병관리청

2가백신 접종계획은?

'22-'23년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접종대상 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우선 접종
(18세 이상 성인대상으로 허용하되, 기초접종 미완료자는 기존 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 진행 필요)

순서	대상	접종권고수준
1순위	· 요양병원·시설 및 그와 유사한 시설 등 · 만역저항자 · 고령층 (60세 이상)	권고
2순위	· 50대 및 기저질환자 · 보건의료인	권고
	· 집단시설 (군 및 입영장병, 교정시설 등)	허용
3순위	· 18세~49세 성인	허용

접종간격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6개월 이후* 접종 권고
*세계보건기구(WHO) 추가접종 가이드라인(22.8월) : 마지막 접종 이후 4~6개월

접종시점 '22.10월 중 (BA.1 7편 2가백신 도입 즉시)

7/8

2022.09.15. 질병관리청

'22-'23년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도 안심하고 참여해 주세요!

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두터운 보호를 지속하고,
2가백신의 감염 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유행 억제를 통한 중증·사망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8/8